

■ 대입제도 개선안 발표…지역 교육계·학생·학부모 반응

“수능내 점수 알 수 있어 좋긴 한데…”

탈많은 등급제 폐지 고2 대부분 ‘환영’
시험과목 축소로 사교육비 늘까 ‘우려’

22일 대통령직 인수위가 수능등급제 폐지, 수능 과목수 축소, 대입자율화 등을 골자로 한 대입제도개선안을 발표한 데 대해 광주·전남지역 중·고·대학과 교육당국, 학부모·학생들의 반응은 찬반 양론으로 엇갈렸다.

학교와 학부모·학생들은 변별력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수능등급제 폐지 등 개선안에 대해 환영분위기가 우세했으나 일각에서는 등급제 무력화, 사교육비 증가 등을 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또 수능등급제에 대해 순차적 폐지를 주장해왔던 전남대 조선대 등 지방대학들은 대입 제도 평변에 따른 대응책 모색에 들어갔다.

당장 올해 수능을 치르는 현재 고2 학년들은 수능등급제 폐지에 친성하는 분위기였다. 특히 본인의 점수를 알 수 있다는 사실에 학생들은 안도하고 있다.

금호고 2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한 교사는 “등급제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워낙 커지 때문에 다들 반기는 분위기”라며 “문제 하나로 등급제가 바뀔 수 있다는데 대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 부분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일고 2학년 부장 이태건 교사는 “요행수는 많은 등급제의 모순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점수를 공개 했을 경우 등급제를 하든,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알아서 적용한다는 점에서 수험생의 불만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논술시험을 치르는 대학들이 적어

질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다. 동아여고 김종재 교사는 “지난해의 경우 수능을 약화하고 내신을 강화하려다 논술까지 강화되는 ‘죽음의 트라이앵글’ 현상을 보였으나 이젠 없어질 것으로 보여 다행스럽다”며 “논술을 치르는 대학이 적어지면 논술 과외로 인한 금전적 낭비도 줄일 수 있어 광주·전남 등 지방학생들에겐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등급제가 무력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전교조 광주지부 김대준 정책실장은 “등급제는 내신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수능을 자격고사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 도입됐기 때문에 폐지보다는 보완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2학년도 수능부터 7개이던 과목수를 5개로 줄이는 것에 대해 광주 대성학원 우부남 진학실장은 “과목 수 축소는 오히려 사교육비를 부족길 것”이라며 “최상위권 학생들은 과목 수에 그다지 관계없지만, 중상위권은 ‘몇 과목 안 된다’는 생각에 사교육을 찾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교조 김대준 정책실장도 “수능제도 자체를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과목수를 줄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남대 문승주 학생지원처장은 “오랫동안 연구해 개발한 제도(등급제)를 단 한 번 실시한 뒤 바로 바꾼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정부는 대입제도보다 본질적인 교육의 방향에 대해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을 발표한 22일 겨울방학 자율학습을 받고 있던 동아여고 2학년 예비수험생들이 수능등급제 사설상 폐지 소식을 접하고 활짝 웃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교조 김대준 정책실장도 “수능제도 자체를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과목수를 줄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김대준 정책실장도 “수능제도 자체를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과목수를 줄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김대준 정책실장도 “수능제도 자체를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과목수를 줄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김대준 정책실장도 “수능제도 자체를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과목수를 줄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김대준 정책실장도 “수능제도 자체를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과목수를 줄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김대준 정책실장도 “수능제도 자체를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과목수를 줄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김대준 정책실장도 “수능제도 자체를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과목수를 줄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김대준 정책실장도 “수능제도 자체를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과목수를 줄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김대준 정책실장도 “수능제도 자체를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과목수를 줄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김대준 정책실장도 “수능제도 자체를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과목수를 줄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김대준 정책실장도 “수능제도 자체를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과목수를 줄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김대준 정책실장도 “수능제도 자체를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과목수를 줄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김대준 정책실장도 “수능제도 자체를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과목수를 줄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김대준 정책실장도 “수능제도 자체를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과목수를 줄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김대준 정책실장도 “수능제도 자체를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과목수를 줄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김대준 정책실장도 “수능제도 자체를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과목수를 줄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김대준 정책실장도 “수능제도 자체를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과목수를 줄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김대준 정책실장도 “수능제도 자체를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과목수를 줄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김대준 정책실장도 “수능제도 자체를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과목수를 줄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김대준 정책실장도 “수능제도 자체를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과목수를 줄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김대준 정책실장도 “수능제도 자체를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과목수를 줄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김대준 정책실장도 “수능제도 자체를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과목수를 줄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김대준 정책실장도 “수능제도 자체를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과목수를 줄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김대준 정책실장도 “수능제도 자체를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과목수를 줄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김대준 정책실장도 “수능제도 자체를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과목수를 줄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김대준 정책실장도 “수능제도 자체를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과목수를 줄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김대준 정책실장도 “수능제도 자체를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과목수를 줄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김대준 정책실장도 “수능제도 자체를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과목수를 줄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김대준 정책실장도 “수능제도 자체를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과목수를 줄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김대준 정책실장도 “수능제도 자체를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과목수를 줄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김대준 정책실장도 “수능제도 자체를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과목수를 줄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김대준 정책실장도 “수능제도 자체를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과목수를 줄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김대준 정책실장도 “수능제도 자체를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과목수를 줄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김대준 정책실장도 “수능제도 자체를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과목수를 줄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김대준 정책실장도 “수능제도 자체를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과목수를 줄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김대준 정책실장도 “수능제도 자체를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과목수를 줄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김대준 정책실장도 “수능제도 자체를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과목수를 줄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김대준 정책실장도 “수능제도 자체를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과목수를 줄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김대준 정책실장도 “수능제도 자체를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과목수를 줄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김대준 정책실장도 “수능제도 자체를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과목수를 줄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김대준 정책실장도 “수능제도 자체를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과목수를 줄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김대준 정책실장도 “수능제도 자체를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과목수를 줄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김대준 정책실장도 “수능제도 자체를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과목수를 줄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김대준 정책실장도 “수능제도 자체를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과목수를 줄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김대준 정책실장도 “수능제도 자체를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과목수를 줄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김대준 정책실장도 “수능제도 자체를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과목수를 줄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김대준 정책실장도 “수능제도 자체를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과목수를 줄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김대준 정책실장도 “수능제도 자체를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과목수를 줄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김대준 정책실장도 “수능제도 자체를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과목수를 줄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김대준 정책실장도 “수능제도 자체를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과목수를 줄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김대준 정책실장도 “수능제도 자체를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과목수를 줄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김대준 정책실장도 “수능제도 자체를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과목수를 줄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김대준 정책실장도 “수능제도 자체를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과목수를 줄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김대준 정책실장도 “수능제도 자체를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과목수를 줄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김대준 정책실장도 “수능제도 자체를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과목수를 줄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김대준 정책실장도 “수능제도 자체를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과목수를 줄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김대준 정책실장도 “수능제도 자체를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과목수를 줄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김대준 정책실장도 “수능제도 자체를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과목수를 줄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김대준 정책실장도 “수능제도 자체를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과목수를 줄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김대준 정책실장도 “수능제도 자체를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과목수를 줄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김대준 정책실장도 “수능제도 자체를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과목수를 줄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김대준 정책실장도 “수능제도 자체를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과목수를 줄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김대준 정책실장도 “수능제도 자체를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과목수를 줄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김대준 정책실장도 “수능제도 자체를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과목수를 줄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김대준 정책실장도 “수능제도 자체를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과목수를 줄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김대준 정책실장도 “수능제도 자체를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과목수를 줄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김대준 정책실장도 “수능제도 자체를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과목수를 줄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김대준 정책실장도 “수능제도 자체를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과목수를 줄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김대준 정책실장도 “수능제도 자체를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과목수를 줄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김대준 정책실장도 “수능제도 자체를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과목수를 줄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김대준 정책실장도 “수능제도 자체를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과목수를 줄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김대준 정책실장도 “수능제도 자체를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과목수를 줄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김대준 정책실장도 “수능제도 자체를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과목수를 줄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김대준 정책실장도 “수능제도 자체를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과목수를 줄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